

2016

2016

ISSUE

BRIEFING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61118 vol.154

미 트럼프정부 정책전망과 전북에 미치는 영향

BRIEFING

CONTENTS

1. 트럼프 정부의 정책전망
2. 트럼프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영향 전망
3. 트럼프 정부 정책기조의 전라북도 영향 및 대응방안

이강진_ 창조경제산업연구부 연구위원

김시백_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부연구위원

이민수_ 농업농촌식품연구부 연구위원



트럼프 정부 정책전망과 전북에 미치는 영향

■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 키워드

- (외교·국방) 경찰국가에서 탈피하고 자국 투자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의 국방비 분담 요구
- (무역·통상) 직접적으로 FTA 재협상, 간접적으로 대중국 규제를 통해 자국 산업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 (산업·투자) 미국 내 투자 확대 및 감세를 통해 미국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고 U턴을 꺾어 낙수효과 유도
- (에너지) 환경 규제 폐지 및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보건·복지) 오바마케어 폐지 등 소극적인 복지 지원 및 최저임금 인상

〈트럼프 후보 대선기간중 주요 경제정책 공약〉

이슈	정책 공약
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등 감세 - 소득세 10~39.6% 7단계 과표를 12~33% 3단계로 축소 - 법인세 최고세율 35%→15% - 상속세 폐지 - 기업 해외수익 법인세 10% - 헤지펀드 매니저 세금 부과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PP, NAFTA 반대, 한미FTA 재협상 - 중국 45%, 멕시코 35% 보복 관세 부과 - 중국 환율조작국 선포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0억 달러 투자 (지지기반인 RUST BELT지역 예상)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드-프랭크법' 폐지 또는 완화 • 소비자금융보호청 폐지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미국 화석연료 산업 재기 유도 - 파리 기후변화협약 파기, UN 지구온난화 프로그램 자금납부 중단 등
최저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나, 인상폭은 미정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바마케어 폐지 • 모든 육아비용 소득 공제

■ 국내에 미칠 영향

- GDP 대비 국방비 분담 요구에 따라 국내 복지 및 SOC에 대한 국가 투자 감소가 예상되며, 지역마다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FTA 재협상 및 대중국 경제 통상 압박에 따라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 특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TPP 철회로 국내 농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FTA 재협상으로 한육우의 전면 개방과 쌀에 대한 수입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내 투자 확대 및 감세 정책으로 미국 자본의 U턴화가 실현될 경우 국내 신규 투자 위축 및 기존 투자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전라북도에 미칠 영향

- (통상) 한미 FTA 재협상, 무역구제 강화 등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예상
 - FTA 재협상, 무역구제 강화,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정책기조로 인해 수출감소 예상
 - ※ 전북은 GRDP 중 수출비중이 15~20%에 달하고, 대미수출 의존도가 9.6% (2015년 기준)로 주요 교역국임
 - 전북의 수출이 1% 감소시 대미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철강 분야에서 589명의 고용감소효과와 0.102%의 GRDP 감소효과가 발생
 - ※ 대미 수출 상위 5개 품목(15년 기준): 자동차 부품, 건설중장비, 폴리에스테일섬유, 철강관
- (투자) 미국기업의 U-turn 으로 해외 직접투자 감소
 - 해외투자 충격은 전북경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며 트럼프 정부 정책으로 1%의 해외투자 감소시 전북에 0.035% GRDP 감소 추정
 - ※ 전북 DSGE(동태적확률일반균형모형)에 의한 추정, 장기적 효과를 누계
- (농업) FTA 재협상, 보호무역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전북 농업부문의 직간접적 피해 우려
 - 농축산물 수입규모가 1% 증가할 경우 전북내 생산량은 0.002% 감소, 16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총GDP효과) 트럼프정부 리스크로 세계 GDP가 0.8% 감소 예상
 - 전북은 3,208억원의 GRDP 감소, 2,944명의 고용감소 예상
 - ※ 미국 시티그룹 chief economist Buiter 분석 결과

■ 우리 도 대응방안

- 상황별 시나리오 작성 후 대응
 -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였기 때문에 상황별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대응 필요
 - 그러나 트럼프의 공약이 입법화 될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근거 없는 예측과 예단은 금물
- 수출구조의 다변화
 - 최근 베트남의 교역강화는 수출구조 다변화 측면에서 고무적이며 동남아, 아랍국가 등 교역구조의 다변화 노력 필요
 - 대미 통상 리스크 분산을 위해 수출 가능한 중견기업 발굴 및 글로벌마케팅 지원을 통한 판로확보 지원정책 강화 필요
- 중국, 동남아 등 전북 주요 교역국의 간접영향 분석 필요
 - 대미 통상 리스크는 전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북의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접영향 또한 고려해야 함
- 한미 FTA 재협상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품목별 모니터링 필요, 또한 무역구제 강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시 철저한 자료준비
 - 재협상에 대한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여 품목별로 정부에 적극적 대응(농축산물 유예품목 및 기간 확대)
- 한육우와 쌀 부문을 중심으로 FTA 재협상 대응책 수립
 - 전라북도 한육우와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오던 품질고급화, 브랜드화, 친환경 생산 지원을 더욱 강화 필요
- 농식품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농식품 검역관련 R&D 선도
 - 농업부문 통상의 핵심 쟁점은 SPS로, 농식품 수출국인 미국의 압력이 커질 것임
 - 지역의 농식품 관련 국가 연구기관과 연계 SPS 관련 전문인력 양성, 검역 관련 기술력 제고 등 과학기술 역량 강화 선도 필요

1. 트럼프 정부의 정책 전망

1)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초

가) 트럼프 주요 발언 정리(2016년)

- 트럼프 후보의 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기존 미국의 경제, 안보 등의 주요 정책들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 기간동안 그의 발언 내용을 통해 국내 및 전라북도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면, 자국의 이익, 특히 노동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음
- 첫 번째 이슈는 자국 산업을 위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여 직접적으로 FTA 재협상, 간접적으로 대중국 규제를 통한 중국 경제 성장 위축으로 국내 수출산업의 타격이 예상됨
 - 트럼프는 지난 권력에서 추진하였던 무역 관련 협정들이 국내 산업 및 노동자의 약화를 초래하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FTA 재협상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국 산업 특히 자동차, 가전 등 제조업에 유리한 내용으로 재협상을 추진할 것임
 -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우, 트럼프 취임 100일 과제에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추가하여 중국을 본격적으로 압박할 것이며, 그럴 경우 중국의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 위축을 초래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 하지만, 미국 역시 교역 대상국 1위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 무역 제재를 가하고 보호 무역주의 기조를 취할 경우 미국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수위 및 시기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FTA 재협상 내용 및 대중국 압박의 정도에 따라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 특히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간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두 번째 이슈는 미국 내 투자 확대 및 감세 정책을 통해 미국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미국 자본의 글로벌 신규 투자 위축 및 기존 투자 회수 가능성이 높아짐
 - 미국을 본사로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미국내 투자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아시아 및 다른 지역의 Greenfield 투자(FDI) 감소로 이어질 것임
 - ※ 2015년 신고금액 기준으로 국내 FDI 총 투자금액은 209억불이며, 이 중 미국은 54.8억불로 26.2%를 차지하며 국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임

→ 세만금 및 전북지역 미국자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기존 공장 등의 철수도 가능함
- 세 번째 이슈는 외교, 국방 차원에서 미국이 더 이상 경찰 국가로서의 위상에서 벗어나 자국 투자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비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짐
 - 자국 내에서 법인세 등의 세금 감세를 추진하면서 인프라 등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경비를 줄여야 하지만, 기존 방위산업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동맹국의 국방비 분담을 요구할 것임
 - 우리 나라 역시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만약 주한미군에 대한 경비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경우, 한정된 국가 예산에서 다른 부문으로의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음

→ 국내 복지 및 SOC에 대한 국가 투자가 줄어들 것이며, 지역의 국책사업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지역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것임

<표-1> 트럼프 후보 대선기간 중 주요 발언 정리

분야	시기	주요 발언 내용
외교 (국방)	2016.04.27	- 우리의 동맹국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다.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 국가들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국은 그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게끔 해야 한다. 우리에게겐 선택권이 없다.
	2016.07.30	- NATO는 그저 그럴 것이다. 28개의 NATO 국가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갈취한다. 나는 나토에 찬성하지만, 당신의 경쟁자 중 한 명이 물어왔을 때, 나는 나토가 테러에 관심이 없는 한 쓸모없다고 말한 적 있다.
	2016.09.26	-28개 나토 회원국 중 많은 수가 자신들이 내야 할 몫을 지불하지 않고 있고,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등 동맹국들이 '적절한'비용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 공정한 몫의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본을 지켜줄 수 없다.
	2016.09.26	-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손해보고 있다.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전 세계 나라를 지켜줄 수도 없다. 클린턴은 사업능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
경제 (무역)	2016.4.27	- 경제를 다시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무역, 이민, 경제정책 또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미국을 다시 정상으로 올려놓아야 한다. 우리의 노동자들이 이 곳 미국에서 직장을 얻고 고소득을 올려 결과적으로 세수를 늘리고 경제 성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6.4.27	- 우리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민에서 그리고 외교에서 항상 최우선으로 여기고자 한다. 나에게 있어 미국인의 일자리와 소득, 안보는 언제나 최우선 사항이 될 것이다.
	2016.06.27	- 우리는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장벽을 세울 것이다.
	2016.07.21	- 우리의 계획은 'America First'를 실현할 것이다. 글로벌리즘이 아닌 아메리카니즘이 우리의 신조이다. 이를 실천하지 않는 정치인이 우리를 이끈다면, 어떤 나라도 미국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2016.07.21	- 끔찍하고 불공평한 무역거래로 인해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당하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 그들은 미국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목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다. 내가 당신의 목소리가 되겠다.
	2016.7.21	- 나는 결코 우리의 노동자를 다치게 하거나 우리의 자유와 자주성을 약화시키는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 대신, 각 나라들과 미국의 이익을 고려한 개별적인 협정을 맺겠다.
	2016.07.30	- 오늘날 당신이 TV를 갖고 싶다면 나는 수천대의 TV를 살 수 있다. TV를 사고 싶을 때, 나는 GE나 Sylvania와 같은 미국산 TV를 사고 싶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삼성, LG, 그리고 소니의 제품이다. 우리는 더 이상 TV를 만들지 않게 되었다.
	2016.08.08	-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수십년동안 무역협정에 대해 틀린 주장을 해 온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한국과의 무역협정으로 미국의 수출이 100억달러 이상 늘고 7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공약은 다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대신 거의 1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고 한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은 거의 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의 대미수출이 한국에 대한 미국 무역적자 규모의 배에 달하는 15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2016.08.24	- 힐러리는 미국이 글로벌리즘에 굴복하기를 원한다. 그녀는 국경 없는 국가를 원한다. 그녀는 외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무역 협정을 원한다. 그녀가 추구하는 정부는 사람들의 의지를 무시하고 미국의 안보를 클린턴 재단에 팔아 넘기려 한다.
	2016.08.24	- 재구장관에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공식 지정케하고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미국 법정과 WTO에 제소하도록 할 것이다.
2016.09.26	- 중국이 통화를 절하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에는 이에 대처하는 사람이 없다. 중국이 자신들의 국가를 재건하는데 미국을 마치 돼지저금통처럼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돈을 빌려가고 있고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	

경제 (국내)	2016.06.22	- 국내 법인이 미국을 떠나고 있고 (해외 법인의 수익을 미국 법인으로 이전할 때 생기는) 높은 세금 등의 문제로 5조 달러의 돈이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나는 이 막대한 양의 돈과 일자리, 기업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2016.07.21	- 감세는 기업과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2016.08.24	- 우리의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슬람 테러리즘은 우리 연안에 퍼져가고 있고, 개방된 국경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앞세워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이 곳 미국에서 직면하고 문제들은 EU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영국이 직면했던 문제와 유사한데, 이는 결국 브렉시트로 이어졌다.
	2016.09.26	- 미국의 인프라는 제3세계 국가 수준이다. 미국 정부가 총동에 6조 달러를 쓰고 있는데, 그 돈으로 미국을 두 번은 더 건설했을 것이다. 클린턴 장관의 아이디어에 세금이 낭비됐다.
	2016.09.26	- 클린턴 후보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증세를 하려고 하지만, 나는 레이건 대통령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세를 추진할 것이다. 어떤 것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 같은가?

나) 트럼프 정부 경제정책 공약

- 트럼프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의 주요 골자를 보면 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통한 낙수효과 기대, 해외투자 기업의 미국내 복귀 유도, 미국내 투자 강화, 미국내 자원개발 강화 등으로 요약

<표-2> 트럼프 후보 대선기간중 주요 경제정책 공약

이슈	정책 공약
조세	○ 법인세 등 감세 - 소득세 10~39.6% 7단계 과표를 12~33% 3단계로 축소 - 법인세 최고세율 35%→15% - 기업 해외수익 법인세 10% - 상속세 폐지 - 헤지펀드 매니저 세금 부과
무역	○ TPP, NAFTA 반대, 한미FTA 재협상 - 중국 45%, 멕시코 35% 보복 관세 부과 - 중국 환율조작국 선포
인프라	○ 5,000억 달러 투자 (지지기반인 RUST BELT지역 예상)
금융	○ '도드-프랭크법' 폐지 또는 완화 ○ 소비자금융보호청 폐지
에너지	○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미국 화석연료 산업 재기 유도 - 파리 기후변화협약 파기, UN 지구온난화 프로그램 자금납부 중단 등
보건	○ 오바마케어 폐지 ○ 모든 육아비용 소득 공제

다) 트럼프정부 통상정책 기조

(1) 미국중심 공정(fair) 무역 강조

- 트럼프정부는 공정 무역(fair trade)을 기본 논리로 무역 상대국들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압박과 무역협정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천명
 - 트럼프는 무역상대국의 덤핑, 중국을 비롯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들의 환율조작 등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고 기 체결한 무역협정의 강력한 이행 촉구 하겠다고 주장

(2) 미국중심 신 통상규범

-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경쟁우위 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미국 주도의 신통상정책 기조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주장

2) 분야별 통상정책 전망

가) 통상정책

(1) 수입규제(무역구제조치)

- 공정무역 기조와 배치되는 불공정 통상사안에 대한 제제를 위해 무역구제조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상무부 자체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수입규제는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건수는 64건으로 2001년 이후 최대이며 2016년에도 49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구제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규제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임

〈표-3〉 최근 미국의 국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

단위 : 건

	중국	한국	인도	브라질	터키	이탈리아	일본	전세계
2015년	11	7	8	5	4	2	2	64
2016년	18	6	4	3	3	2	2	49

자료: 국제무역연구원, 미국신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 환율조작 감시

- 미국은 2015년에 외국의 불공정 환율 관행을 감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에 따라 재무부가 2016년 4월과 10월에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4월 보고서에서 발표한 감시대상국(Monitoring List)은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 5개국이었으며, 10월 보고서에서는 스위스가 추가됨
 - 환율조작에 대한 감시는 주로 중국, 일본, 한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3개국은 이미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와 GDP에서 차지하는 경상수지 흑자 수준이 높기 때문에 환율시장 개입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음

〈표-4〉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평가지표

	대미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	3년간 GDP 비중 변화	시장개입	
	15.7-16.6)	GDP 대비 비중		GDP대비 순외환 매입 비중	지속적인 순외환매입
중국	3,561	2.40%	0	-5.10%	No
독일	711	9.10%	2.3	-	No
일본	676	3.70%	2.6	0.00%	No
한국	302	7.90%	2	-1.80%	No
대만	136	14.80%	5.2	2.50%	Yes
스위스	129	10.00%	-1.6	9.10%	Yes

자료: 미국 재무부,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S," 2016.10.14.

(3) 한미 FTA 이행 준수 강조, 개정협상 제안 가능

- 트럼프 당선자는 한미 FTA 협정의 이행을 강조하고 필요시 압력의 강도를 높일 수 있음
 - 한미 FTA는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된 이후 원산지검증,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등 이행이슈가 제기되어 양국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 해왔음

- 그러나 이행의무에 대한 시각차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거나 신규 이행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트럼프정부는 무역구제조치 강화, 무역 흑자국에 대한 외환정책 모니터링 및 필요시 적극 제제, 한미 FTA 이행준수 및 재협상 가능성 제고

나) 경제정책

(1) 법인세율 감면, 미국내 투자 활성화

○ 법인세 등 감세로 낙수효과 정책기조 전환

- 소득세 최고세율 39.6%→33% , 법인세 최고세율 35%→15%, 기업 해외수익 법인세 10%, 상속세 폐지 등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어 기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낙수효과를 추구
- 헤지펀드 매니저 세금 부과

(1) 미국 해외투자기업 U-turn 촉진

○ 미국기업 해외소득에 대한 조세유예제도 폐지

- 기업의 해외자산을 미국으로 이전시 1회에 한해 10% 특혜세율 적용

2. 미국 트럼프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영향 전망

1) 거시적 영향

(1)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 최근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중국산 수입제품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가격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과 중국에 진출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큰 위협
-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1건(반덤핑 및 상계관세)이며, 이 중 9건이 중국과 함께 제소되었음
- 2012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고 2013년에 조치가 부과되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지자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하였으나 금년 초에 중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됨

(2) 한미FTA의 이행 강조 및 FTA 재협상

○ 한미 FTA 협정의 이행 촉구 및 필요시 품목별 압력의 강도를 높일 수 있음

-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의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나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유리한 FTA 이행촉구 압력이 거세질 것임

(3) 대한 무역적자 모니터링 및 환율 제제

- 미국의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와 환율조작 제제는 중국이 타겟이지만 한국과의 무역수지 추이, 원/달러 환율 움직임, 정부의 환율정책을 주시할 것으로 예상
 - 미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 보고서(4월, 10월)에서 한국은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재무부가 제시한 감시대상 3가지 요건 중 ①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과 ②GDP에서 차지하는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기준 등 2가지 요건에서 기준을 초과함
 - 미국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폭을 감소시키고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춰 중장기적인 원화의 절상이 필요하다고 평가

(4) 미국내 제조업 육성 (기업 U-turn)으로 해외투자 위축

-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특정 산업 분야의 이익을 위해 뛰어난 기업인 출신, 대기업 컨설턴트, 로비스트 10여 명이 정권인수팀에 영입됐다고 보도
 - NYT에 따르면 인수팀에 영입된 제프리 아이제나흐('버라이즌')는 '트럼프 내각'의 연방통신위원회(FCC) 간부들의 인선에 참여할 전망
 - 마이클 카탄자로('데번 에너지', '엔카나 오일·가스')는 에너지 분야 로비스트이며 오바마 대통령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반기를 들어 왔던 인사
 - 이외에도 철도, 식품, 철강 등 분야에서 활동하던 로비스트들이 대거 트럼프 인수팀에 포함
 - 인수팀이 친기업 인사로 채워지고 기업의 U-turn을 촉진함으로써 해외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짐

(5) 방위비 분담

- 한국의 국방비는 2016년 기준 총 정부재정 2,683,872억 원 중 387,995억 원으로 전체의 14.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5.01%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표-5> 방위비 분담금 추이(2000-2015)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분담금합의액 (억 원)	4,685	4,882	6,135	6,690	7,465	6,804	6,804	7,255
원화비율	60%	62%	88%	88%	88%	100%	100%	100%
국방비 중분담금 비율	3.24%	3.17%	3.75%	3.82%	3.94%	3.22%	3.02%	2.96%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분담금합의액 (억 원)	7,415	7,600	7,904	8,125	8,361	8,695	9,200	9,320
원화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방비 중분담금 비율	2.78%	2.62%	2.67%	2.59%	2.54%	2.52%	2.58%	2.49%

자료 : e-나라지표(방위비분담특별협정) 2000-2015

- 주한미국주둔군지위협정(SOFA) 제 5조(시설과 구역)에 대한 특별협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비인적(非人的)분담금과 특별협정에 의한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하여 직간접적 지원을 포괄하고 있음(e-나라지표, 방위비 분담금 현황)
 - 2014년 1월 11일 타결된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의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전년도 부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분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단, 연도별 인상 상한선 4% 미만으로 2014년 기준 총액 9,200억 원)

- 2015년 기준 한국 방위비 부담금은 9,320억 원으로 2013년 미국 의회조사국이 발간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부담금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00%를 부담하게 된다면 전체 국방비 예산의 5%에 해당하는 약 2조원 수준일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기존의 방위비 부담금 이외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현재는 주한미군이 운용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 재협상 과정에서 사드 1개 포대당 약 1~2조원에 달하는 구매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사드 구매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사드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사드 철수 뿐만 아니라 다른 전략 무기 강매를 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이 현재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음

2) 주요산업별 영향

(1) 자동차 산업

- 대미 수출 물량의 관세 부과로 미국산 자동차 대비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한미 FTA 체결시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입 관세 조항은 4년내 무관세였으나, FTA 폐지시 이전 관세인 2.5%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가격 경쟁에 불리해질 것으로 판단
 - ※ 단, 기존 한미 FTA 체결후 대미 수출 증가 효과가 미미하였고 TPP 철회로 일본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부정적 요인이 제한적으로 발생할 것임
-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수출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 경쟁국인 일본의 엔화 강소화 상대적인 경합도 측면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다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
 - 달러 약세를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과 유동성 공급 확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여 수출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자동차 산업의 대부분 수출 물량이 달러화로 결제하고 있어 수출 채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멕시코산 자동차에 관세 35% 부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중에서 멕시코에 투자한 업체, 특히 기아차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미국 일자리 보호를 위해 멕시코 투자를 견제하는 경향이 강해질 경우 멕시코 투자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2) 철강산업

- 국내의 대비 철강재 수출은 13% 내외에 불과하나 상대적으로 고마진 수출처였기 때문에 관세 장벽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 단,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명시하여 위안화 절상 압력이 가해질 경우 중국 철강재 수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내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음
- 본격적인 환율 전쟁으로 중국 산업 생산 회복이 더뎠을 수 있으며, 이는 철강재의 실수요 위축을 초래하여 국내 철강산업의 수출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

(3) IT 산업

- 법인세 15% 일괄 인하 및 소득세를 낮춤으로써 미국 IT 기업 및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함에 따라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 삼성과 LG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 플랜과 수자원 규제 등 각종 규제들을 철폐해서 미국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스마트폰 및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 IT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어 부담요인이 될 것임

- 기후행동플랜 및 수자원 정책 철폐 등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전기차 및 태양광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4) 석유화학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 축소 및 파리 기후협약 철회, 가스 및 석탄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에너지 시장에 대한 구조 변화가 예상됨
- 전통 에너지원인 가스와 석탄 개발 확대로 원자재 가격 안정화가 예상되며, 이는 대부분의 연료원을 수입하는 국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관련 기업들도 원료가격 하락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미국이 셰일 가스 등의 에너지원을 토대로 자국 산업 보호 확대를 법인세 인하, 달러 약세를 통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경합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5) 바이오산업

- 약가 규제 정책 무효화로 헬스케어업체들의 매출액 불확실성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이오 의약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이에 따라 글로벌 바이오 의약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국내 업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3) 농업분야 영향

(1) TPP

- TPP에 부정적인 트럼프 당선으로 농업통상에는 긍정적
 - TPP 참여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TPP 발효 시점이 지연되거나 TPP가 무산되는 것은 긍정적 효과
 - 우리나라는 현재 TPP 가입의사를 표명했을 뿐, TPP 가입국은 아님. 따라서 TPP 발효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TPP 회원국과의 수출, 수입 모두 경제적 실익이 있음

1) TPP 지연의 경우

- 우리나라는 12개 TPP 국가 중 10개국과 FTA 발효¹⁾한 만큼 TPP 발효가 지연될 경우 수출시장에서 특별관세에 대한 상대적 혜택을 연장할 수 있음
- 우리나라가 TPP 참가할 경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은 농업임. 따라서 TPP가 지연될 경우 농업통상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음
- TPP 발효 지연으로 기 체결 FTA 이행이 일정정도 진행된 후 TPP에 가입하게 되면 TPP 가입으로 인한 충격이 줄어듦
- TPP에서 향후 농업통상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는 TPP SPS²⁾ 규범 이행임. TPP 발효가 지연되면 이에 대한 대응반안 마련 및 시행 등 가입 전 준비시간 확보 가능

2) TPP 무산의 경우

- TPP가 무산되면 향후 대만,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 현재 TPP 참가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들과 함께 향후 TPP를 재추진함으로써 후발주자로서의 불리함 축소할 수 있음

1) 12개국 중 일본, 멕시코와 현재 FTA 미 체결되어 있음

2) '동식물 검역 및 위생 관련 조치'로 WTO sps 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과 절차 도입. 비관세 장벽인 sps조치로 인한 무역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농산물 수출국에 유리함

(2) FTA의 농업통상 영향

□ FTA : 한-미 FTA 수정협상이나 재협상 요구로 부정적인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됨

1. 농산물 시장접근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는 크지 않을 것임
 - 한-미 FTA의 농업분야는 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짐. 따라서 시장접근에 대한 추가요구사항이 많지 않을 전망
2. 동식물검역 등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한-미 FTA 협상 당시 가장 큰 논쟁이 되었던 분야는 쇠고기 위생 조건, 쇠고기 연령, 과일 등의 검역 문제였음
 - 한-미 간 WTO 분쟁 사건의 경우도 미국이 제소한 부분은 동식물검역조치, 유효기간, 주세, 쇠고기 수입제한 등 농업 관련 분야임
 - 미무역대표부(USTR)에서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언급된 쇠고기 수입규제, 과일류 수입금지조치, GMO 관련 규정 등 SPS 사항들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

〈표-6〉 미국이 지적하는 우리나라 농식품 관련 무역장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육류		조류독감으로 인한 워싱턴 주와 오레곤 주의 가금육 수입 금지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과일				열대과일, 유지작물, 견과류에 대한 새로운 잔류 농약 리스트 도입
식량	병해충으로 인한 태평양 연안북서부 산 신선감장 수입 금지			
전체			복잡한 GMO 검사제도 및 검사 지연	

자료 : USTR(2013~2016). National Trade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3.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요구 가능성 높음
 - 한-미 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 논의하기로 협의
 -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013년 '30개월 미만; 합의가 잠정적인 합의라며 전문적인 수입개방을 요구
 - 트럼프의 당선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일환으로, 미국 정부가 자국의 쇠고기 산업 보호를 위해 수출 확대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4. 쌀 수입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미국은 2016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상당치 513%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국가임³⁾
 - 우리나라는 TRQ 물량인 40만 8700톤을 5%의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고 있는데, 향후 양자협상에서 미국은 저율 관세할당(TRQ) 물량 확대 요구 가능성이 높음
 - 이와 함께 저율 관세할당 물량에서 미국산 쌀 비중의 확대가 어려울 경우 513%의 관세율을 낮출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음

3)미국, 중국, 태국, 베트남, 호주 등 5개 국가가 이의 제기한 상태

3. 전라북도에 영향 및 대응방안

1) 전라북도 경제구조

(1) 전라북도 대미 수출구조

- 전라북도는 2015년 기준 79억5700만 달러를 수출, 이중 대미수출은 7억6400만달러로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비중은 증가세
 - 전북의 대미수출금액은 증가세(2010년 4.35억달러→2015년 7.64억달러)

〈표-6〉 전라북도 주요 수출국 수출추이

(단위 : 백만달러, %)

수출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중 (2015년 기준)
수출액 총계	10,506	12,818	12,007	10,123	8,565	7,956	
중국	1,325	1,689	1,398	1,353	1,262	1,278	16.1
미국	435	627	844	838	898	764	9.6
러시아	624	1,102	1,256	774	325	51	0.6
대만	506	782	485	493	529	366	4.6
일본	457	620	493	420	417	374	4.7
브라질	75	333	443	361	184	165	2.1
사우디아라비아	147	199	189	193	222	244	3.1
인도	338	353	200	197	226	203	2.6
베트남	248	348	269	303	510	859	10.8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전북의 대미수출 주요 품목을 보면 자동차, 화학, 철강 등
 - 2015년(MTI 4단위 기준) 자동차부품(1.22억달러)이 가장 많이 수출되었고 다음으로 기타자동차(1.11억달러), 건설중장비(1.08억달러), 폴리에스텔섬유(0.50억달러), 철강관(0.41억달러) 순

〈표-7〉 전라북도 주요 품목별 대미 수출입액

(단위: 천달러)

품목명	2015년			2016년(누계:9월)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총계	763,287	470,945	292,341	578,263	317,200	261,063
자동차부품	122,782	5,808	116,973	73,180	3,736	69,444
기타자동차	111,292	407	110,885	118,409	276	118,133
건설중장비	108,770	58	108,712	33,480	29	33,451
폴리에스텔섬유	49,932	0	49,932	33,813	0	33,813
철강관	40,939	140	40,799	9,212	120	9,092
무기류부품	33,105	79	33,025	21,134	288	20,846
화학기계	23,915	163	23,751	38,371	73	38,298
편직제의류	23,892	28	23,863	17,038	18	17,020
기타화학공업제품	22,847	4,909	17,938	31,848	2,796	29,052
합성수지	18,546	3,862	14,683	20,745	4,017	16,728
기타정밀화학제품	16,703	3,350	13,353	11,307	1,675	9,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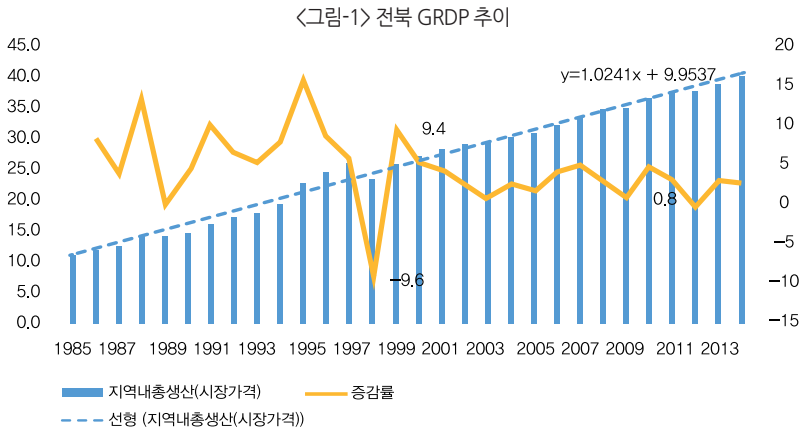
기타석유화학제품	15,569	8,900	6,668	9,460	2,782	6,678
평판디스플레이	14,320	33	14,287	10,997	86	10,911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전라북도 대미 수출 증가세, 주 수출품목은 자동차, 기계, 화학, 철강

(2) 전라북도 GRDP 성장 추이

- 전라북도는 평균적으로 1조241억의 GRDP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은 평균 추세 성장에 미치지 못함
- 전북의 외부충격 내생성을 보면 IMF 에는 매우 크게(-9.6%) 영향을 받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덜(0.8%) 영향을 받음



⇒ 전라북도 외부충격 내생성 증가, 최근 추세 미만 성장

2) 전라북도에서의 영향

(1) 거시적 영향 분석

- 전북은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에 직면
 - 전북경제가 내생성이 강화되었으나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한 전라북도의 불확실성의 고조될 것으로 예상
 - 최근 3년 동안 GRDP 성장은 평균 추세선에 미치지 못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와 더불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대응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
- 미국 시티그룹 chief economist Buiter 박사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세계 GDP의 0.7%~0.8% 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블룸버그)
 - Buiter 박사의 결과를 전북에 적용하면 3,208억원의 GRDP가 감소하며 고용은 2,944명(제조업 주력산업 중심 산출평균⁴⁾) 감소 예상
 - 전북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리스크가 가세된다면 경기침체 영역으로(일반적으로 2% 미만의 경제성장)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짐
- 최근 연구된 전북 DSGE⁵⁾ 모형에 의하면
 -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한 리스크 정도를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무역이 감소할 것이고 미국내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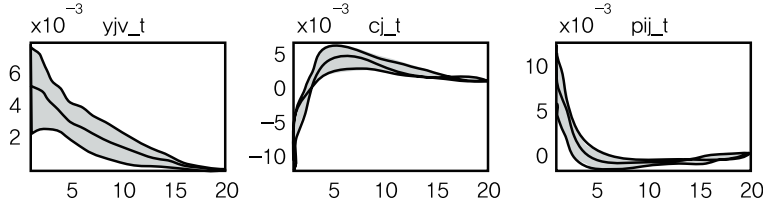
4)화학, 기계및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운송장비의 산출평균

5)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동태적확률일반균형모형)

육성을 위해 해외 투자(특히 Greenfield 투자)는 감소할 것임을 고려할 때

- 해외투자 충격의 전라북도 GRDP에 미치는 효과 (첫 번째 그림)가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의 해외투자 감소가 전북 GRDP에 0.035% (금액: 140.3억; 고용 129명) 영향 미침
- 전북 GRDP의 변동요인 중 중요한 요인은 생산성과 수출이며 수출은 15~2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의 감소는 GRDP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

<그림-2> 해외투자충격의 전북에 미치는 영향



- ⇒ 전북의 경제구조상 수출이 GRDP 차지하는 비중이 15%-20% 수준, 해외투자충격이 전북 GRDP에 장기영향 미침(1% 충격이 장기적으로 0.035% 영향)
- ⇒ Buiter 박사 결과를 전북 적용시 3,208억원의 GRDP 감소, 2,944명(제조업 주력산업 중심 산술평균)⁶⁾ 고용 감소 예상

6) 화학, 기계및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운송장비의 산술평균

(2) 산업별 영향 분석

- 자동차/부품산업, 석유화학산업, 철강산업의 수출 규모가 1% 감소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라북도 사회계정행렬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대비하여 전북내 생산량의 0.135%가 감소하고 589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GRDP는 0.1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산업	생산 감소 효과	고용 감소 효과	GRDP 감소 효과
자동차/부품	0.082%	378명	0.067%
석유화학	0.042%	175명	0.029%
철강	0.011%	36명	0.006%
합계	0.135%	589명	0.102%

- 농수산품의 수입 규모가 1% 증가할 경우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14년 기준 대비하여 전북내 생산량의 0.002%가 감소하고 16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GRDP는 0.0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산업	생산 감소 효과	고용 감소 효과	GRDP 감소 효과
농업	0.002%	160명	0.005%

3) 전라북도의 대응방안

(1) 거시적 대응

- 상황별 시나리오 작성 후 대응
 - 트럼프의 당선으로 향후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황별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임
 - 그러나 트럼프가 언급한 무역 관련 공약 중 어느 정도까지 입법화 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근거 없는 예측과 예단으로 국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피해야 함

○ 수출구조의 다변화

- 대미 통상 리스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험분산 노력 필요
- 최근 베트남으로의 수출 증가는 품목이 편중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기타자동차 중심) 수출구조 다변화 측면에서 고무적임
- 수출가능한 중견기업의 발굴 및 글로벌마케팅 지원을 통한 판로확보 정책 강화 필요

○ 중국, 동남아 등 전복 주요 교역국의 간접영향 분석 필요

- 대미 통상 리스크는 전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복의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접영향 또한 고려해야 함
- 예를 들어, 미국의 중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통상압력은 전복의 대중국 중간재(원료 및 부품) 수출을 감소시키므로 교역국들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야 함

(2) 품목/분야별 대응

○ 한미 FTA 재협상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품목별 모니터링이 필요, 또한 무역구제 강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시 철저한 자료준비
- 재협상에 대한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여 품목별로 정부에 적극적 대응(농축산물 유예품목 및 기간 확대)

○ 한육우와 쌀 부문을 중심으로 대응책 수립

- 트럼프의 당선으로 농업통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분야는 한육우와 쌀임. 트럼프 정부는 한육우의 전면개방과 밥쌀용 쌀에 대한 수입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쌀과 한육우는 전라북도 농업생산액에서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전체 생산액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품목임
- 따라서 전라북도 한육우와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오던 품질고급화, 브랜드화, 친환경 생산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농식품 검역관련 R&D 선도

- 향후 농산물 무역에서 협상의 쟁점이 될 분야는 SPS로, 농식품 수출국인 미국은 TPP 협상에서처럼 SPS가 농식품 수출구에 유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음
- SPS 규범내용이 수출국에 유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검역분야를 중심으로 좀 더 정밀한 대응이 요구됨
- 검역기준과 조건의 강화에 따라 향후 검역분쟁에서의 승패는 국가별 과학기술력의 차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검역관리체계는 국민건강, 식량안보와도 관련이 깊은 만큼 향후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것임
- 전라북도는 농식품 관련 국가 연구기관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SPS 관련 전문인력 양성, 검역 관련 기술력 제고 등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선도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농식품 검역관련 R&D 선도

- 향후 농산물 무역에서 협상의 쟁점이 될 분야는 SPS로, 농식품 수출국인 미국은 TPP 협상에서처럼 SPS가 농식품 수출구에 유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음
- SPS 규범내용이 수출국에 유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검역분야를 중심으로 좀 더 정밀한 대응이 요구됨
- 전라북도는 농식품 관련 국가 연구기관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SPS 관련 전문인력 양성, 검역 관련 기술력 제고 등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선도할 필요가 있음